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코로나팬데믹과 국가기능의 변화 : ‘보건국가’ 의 부상?

홍 준 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SNU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

차 례



I. Prolog

II. 물음들

III. 진단과 제언

IV. Epilog

I. Prolog

-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와 사회
- #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와 사회**

- **뉴노멀(New Normal)과 국가의 통치 시스템**

- 정부의 역할 가운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의 비중이 커질 것
 - 안보 개념의 변화: 군사적 개념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에 대한 대처’로 확장
 - 보건국가, 건강안전보장국가로 대전환이 불가피
 - 과학기술에 기반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중요성

- **국제질서의 변화**

- 세계화(globalization) 현상에 미치는 영향
 - 경제, 문화, 여행, 무역 등 모든 분야에서 진행된 지구화는 기후변화와 더불어 감염병의 지구화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확인
 - 지구화를 선도한 유럽연합(EU), 유럽각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경봉쇄와 격리조치 단행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와 사회**
 - 개방 자체를 둘러싼 각국의 고민
 - 개방과 연대 vs. 자국의 이익 추구
 - 자유 vs. 통제(방역민주주의)
-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 코로나방역의 글로벌스탠다드로 부상한 한국
 - 개방과 협력, 국가와 사회, 개인과 공동체의 연대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대내외적인 자기혁신의 길은?

II. 물음들

- # 답보다는 물음이 더 많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슈
- # 제기되는 물음들
- # ‘괜찮을까?’ QUESTIONS

답보다는 물음이 많은 코로나바이러스 펜데믹



• 코로나19 통계의 이면

- 숫자의 이면: 각국의 보건의로 여건, 문화,
정부의 특성, 초동조치의 적절성 등
-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각국 정부의 성적표

<표> COVID-19 Coronavirus Pandemic

: Reported Cases and Deaths by Country, Territory, or Conveyance

* Last updated: May 01, 2020, 12:41 GMT

* 출처: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

2020년 5월 1일 확인

Country, Other	Total Cases	New Cases	Total Deaths	New Deaths	Total Recovered	Active Cases	Serious, Critical	Total Cases/ 1M pop	Deaths/ 1M pop	Total Tests	Tests/ 1M pop
World	3,327,239	+23,019	234,702	+872	1,052,564	2,039,973	50,823	427	30.1		
USA	1,095,304	+281	63,871	+19	155,737	875,696	15,226	3,309	193	6,391,887	19,311
Spain	239,639		24,543		137,984	77,112	2,676	5,125	525	1,455,306	31,126
Italy	205,463		27,367		75,545	101,551	1,694	3,398	463	1,379,217	32,735
UK	171,253		26,771		N/A	144,138	1,559	2,523	354	901,905	13,286
France	167,178		24,376		49,476	93,326	4,019	2,561	373	724,574	11,101
Germany	163,009		6,623		126,900	29,486	2,415	1,946	79	2,547,052	30,400
Turkey	120,204		3,174		48,886	68,144	1,514	1,425	38	1,033,617	12,255
Russia	114,431	+7,833	1,169	+95	13,220	100,042	2,300	784	8	3,700,000	25,354
Iran	95,646	+1,006	6,091	+63	76,318	13,237	2,899	1,139	73	475,023	5,656
Brazil	87,187	+1,807	6,006	+105	35,935	45,246	8,318	410	28	339,552	1,597
China	82,874	+12	4,633		77,642	999	38	58	3		
Canada	53,236		3,184		21,423	28,629	597	1,411	84	806,449	21,367
Belgium	49,032	+513	7,703	+109	11,892	29,437	740	4,231	665	253,198	21,847
Netherlands	39,791	+475	4,893	+98	N/A	34,648	783	2,322	286	225,899	13,184
Peru	36,976		1,051		10,405	25,520	651	1,121	32	318,252	9,652
India	35,043	+180	1,154		9,068	24,821		25	0.8	902,654	654
Switzerland	29,705	+119	1,737		23,400	4,568	167	3,432	201	271,500	31,271
Portugal	25,351	+306	1,007	+18	1,647	22,697	154	2,486	99	395,771	38,814
Ecuador	24,934		900		1,558	22,476	146	1,413	51	69,054	3,914
Saudi Arabia	22,753		162		3,163	19,428	123	654	5	200,000	5,745
Sweden	21,520	+428	2,653	+67	1,005	17,862	531	2,131	263	119,500	11,833
Ireland	20,612		1,232		13,386	5,994	123	4,174	250	153,954	31,179
Mexico	19,224	+1,425	1,859	+127	11,423	5,942	378	149	14	81,912	635
Pakistan	17,439	+966	391	+30	4,315	12,733	111	79	2	182,131	825
Singapore	17,101	+932	15		1,244	15,842	21	2,923	3	143,919	24,600
Chile	16,023		227		8,580	7,216	392	838	12	180,517	9,443
Israel	16,004	+58	223	+1	8,758	7,023	105	1,849	26	364,467	42,108
Austria	15,531	+79	589	+5	13,110	1,832	124	1,724	65	264,079	29,321
Belarus	14,917	+890	93	+4	2,918	11,906	92	1,579	10	186,262	19,712
Qatar	14,096	+687	12	+2	1,436	12,648	72	4,893	4	97,726	33,920
Japan	14,088		430		2,460	11,198	308	111	3	165,609	1,309
Poland	13,105	+228	651	+7	3,491	8,963	160	346	17	354,628	9,370
UAE	13,038	+557	111	+6	2,543	10,384	1	1,318	11	1,122,000	113,443
Romania	12,567	+327	726	+9	4,328	7,513	249	653	38	183,688	5,548
Ukraine	10,861	+455	272	+11	1,413	9,176	143	248	6	118,545	2,711
S. Korea	10,774	+9	248	+1	9,072	1,454	55	210	5	623,069	12,153
Indonesia	10,551	+433	800	+8	1,591	8,160		39	3	102,305	374
Denmark	9,311	+153	460	+8	6,729	2,122	61	1,608	79	206,576	35,665

제기되는 물음들 (Questions arising)



-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 성과**
 - 누가 선진국인가 하는 의문 제기
 - 새로운 자각, 그러나 세계질서의 근본적 변화?: Before Corona / After Corona?
- **각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처 결과에 따른 정치적 지형변화가 불가피**
 - 중국?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그리고 일본?
 -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한 충격이 불가피: glocalization으로의 선회?
 -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도 불가피, 그러나 대안이 있는가?

‘괜찮을까?’ QUESTIONS

- **미국은 괜찮을까?**
 - 리더십, 잃어버릴 리더십이 있었던가?
 - T. Friedman이 말하는 제3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이미 뒤처지기 시작한 미국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더욱 가파른 내리막으로 몰리는 형국?
 - 리더십과 군사력의 부조화(mismatch), 이로 인한 군사적 · 정치적 충돌 위험 증대 (ex. 대중국, 대이란, 대북한 등)
- **EU는 괜찮을까?**
 - EU 통합의 초석인 쉥겐조약(Schengener Abkommen)의 와해?
 - 결속력 이완 또는 쇠퇴

‘괜찮을까?’

• 일본은 괜찮을까?

– 아베의 ‘코로나 패착’ 4가지

① 코로나19 발병 은폐 · 축소 의혹

② 애물단지 된 아베노마스크

③ 국민 공분을 산 말말말:

“이런(코로나19) 경험도 분명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에 큰 재산이 될 겁니다.”

④ 오락가락 현금 지급 정책

*출처: 국민 등 돌리게 한 아베의 ‘코로나 패착’ 4가지 장면, 한국일보 2020년 4월 29일자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281130088817>)

– 아베의 ‘코로나 패착’ → 지지율 하락 → 정권의 위기?

‘괜찮을까?’

• 중국은 괜찮을까?

- 대내적으로 중앙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와 지방정부의 실책 등을 둘러싼 논란
- 초기대응 실패와 관련한 은폐 의혹, 투명성 논란 (‘리원량 사건’)
- 대외적으로는 중국책임론 대두
 - 중국의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제사회 입지 악화 가능성

[사진] 故 리원량 (李文亮)

“중국 공청단은 리원량 의사를 올해 ‘중국청년 5.4 훈장’ 수여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코로나 출현을 알린 사실이나 ‘허위 사실 유포죄’로 ‘훈계서’를 쓴 내용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청년보망 캡처]

*출처: '코로나 폭로'는 쏙 뺐다 ... 리원량 훈장 주고도 조롱당한 中,
중앙일보 2020년 4월 22일자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760226>)



‘괜찮을까?’

- 국가와 정부는 괜찮을까?

- 정치적 리더십 위기
- 사회통제의 이완, 정치적 파국 또는 정치·사회 불안정 악화 ?
- 경제위기 극복 가능한가?

- 국가기능의 변화

- ‘거대정부의 진격’ , ‘국가의 귀환’ 인가?
- ‘위험에 빠진 민주적 법치국가’ (demokratischer Rechtsstaat in Gefahr),
‘파시스트-히스테릭 보건국가’ (faschistoid-hysterischen Hygienestaat)?

III. 진단과 제언

- # 거대정부의 진격
- # 보건국가, 보건위기국가, 감시국가
- # 건강안전보장국가에의 길
- # ISSUES TO TACKLE

거대정부의 진격



- 국가기능의 역사적 변천



-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의 변화**
 -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는 공감대
‘국가의 귀환’ , ‘거대정부의 진격’ , ‘거대국가’ , ‘감시국가’ 등
 -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맞서기 위해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 현금 카드 투입
 - 팬데믹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전시 수준 통제 강화
 - 전쟁 수사: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war against invisible enemy),
World War III(아베)
 - 최근 대부분의 국가가 공공장소 집합행위와 이동의 자유 제한 조치 단행,
50개국 이상이 국가비상사태 선포

거대정부의 진격

- 거대정부의 진격, 두 가지 방향

- 1) 권력의 중앙집중

- 행정권의 급속한 팽창, 그로 인해 민주주의 공간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적 가능성
 - ‘큰 정부’ 보편화
 - Coronavirus Means the Era of Big Government Is Back.
 - 대공황(the Depression), World War II,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공통된 현상
 - 민주주의가 공고한 나라와 민주주의가 취약한 나라에서 모두 권력의 중앙집중 경향이 나타나지만, 권력 확대의 메커니즘에서는 차이가 있음

거대정부의 진격

- 거대정부의 진격, 두 가지 방향

- 1) 권력의 중앙집중

- 민주주의가 공고한 국가의 경우: 위기국가 → 큰 정부

- 미국: 여야가 공히 연방 및 주 수준에서의 광범위하고 공격적인 대응 지지

- 연방 재정적자가 막대한 상황에서도 추가적 재정지출 수용

- 포퓰리스트 행동주의자에 가까운 Trump 대통령이 열성적으로 지출 확대 뒷받침

- 각국의 정치상황에 따라 권위주의 ‘스트롱맨(strong man)’ 입지 강화

- [참고] i) Trump와 State Governors의 대립: 경제활동 재개 명령권을 둘러싼 갈등

- ii) 단방제, 단일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팬데믹 대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특히 광역단체)의 역할 두드러짐. 대구광역시가 방역한류를 홍보하는 것을 두고

- 초기방역실패를 지적하는 시각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력을 다했다는 평가 존재

- *출처: “방역한류 출발지가 대구라고요?” …뭇매 맞는 대구시, 경향신문 2020년 4월30일자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302255005

- 거대정부의 진격, 두 가지 방향

- 1) 권력의 중앙집중

- 민주주의가 취약한 국가의 경우: ‘방역독재’ , ‘방역전체주의’ 경향 대두

-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주적 정당성을 방역 성과와 불가피성으로 보완하려는 경향
 - 이미 일부 국가에서 보건위기 대응을 위해 정당화되는 범위 이상으로 권력 확대 시도
: 불충분한 감독 메커니즘을 통해 위기를 활용하거나 위기를 빌미 삼아
정치적 반대세력 억압하고 권력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
 -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공산화 바람?
: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사회불만, 99%의 분노 폭발 → 좌파 정부 확산 가능

거대정부의 진격

- 거대정부의 진격, 두 가지 방향

- 2) 위기국가: 보건·방역 기능 강화 불가피 → 거대국가, 큰 정부

- 보건국가, 보건위기국가 지향

- 국방이나 소방 조직과 인력을 평상시 최소화시켰다가 유사시 즉각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위기국가기구는 확대되는 경향

- 그러나 위기 이후에도 위기 이전 수준(pre-crisis level)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음 : 불가역효과(ratchet effect)

- 특히 위기 이후 단계(post-crisis stage)에도 경제회복 등 국가와 정부의 역할 증대 요인 상존 가능성

보건국가, 보건위기국가, 감시국가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핵심적인 국가임무: 감염병의 예방과 방역
 - War against the Pandemic to be waged by Government.



건강안전국가에의 길

- 국가란 무엇인가?

- 국가의 핵심 임무(Core of the Cores)는 무엇인가?
- 국민의 생명, 건강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가장 핵심적 · 본질적인 임무

- 새로운 안보 개념

- 기존의 안보 개념(conventional national security concept)에 감염병 위협 추가
 - 국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인 위협, 즉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침공이나 전쟁, 내부에서의 내란, 테러 등에 못지않게 감염병 위협의 심각성 증대
 - Bio-Terror(직접적 · 의도적)는 전통적인 안보 개념에 무리 없이 포함
 - 이에 비해 감염병 위협은 자연발생적일 수도, 고의나 과실에 의한 인위적 발생일 수도 있고 발원, 전파, 확산 등 모든 측면에서 훨씬 다양한 양상과 경로 가질 수 있음
- [참고] 미국 등 구미권 국가들과 중국의 코로나19 책임 공방

- **보건국가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시스템 패키지**

: Elements of Pandemic Preparedness

1) 조직

- NSC에 상응하는 국가보건(감염병 예방 및 방역) 컨트롤타워 신설 필요
- 주무부처로서 중앙행정기관 수준의 조직 확충
- ‘보건부’ 신설 문제
 - 보건복지부로부터 분리
 - 복지기능과의 연계 유지방안
 - 정치와 과학의 실천적 조화 · 협력: 정치적 책임과 전문적 역량의 유기적 공조

건강안전국가에의 길

- **보건국가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시스템 패키지: Elements of Pandemic Preparedness**

- 1) 조직

- NSC에 상응하는 국가보건(감염병예방 및 방역) 컨트롤타워 신설 필요
 - 주무부처로서 중앙행정기관 수준의 조직 확충
 - ‘보건부’ 신설 문제: 보건복지부로부터 분리? 복지기능과의 연계 ?;
 - 정치와 과학의 실천적 조화 · 협력 (정치적 책임과 전문적 역량의 유기적 공조)
 - 중앙 컨트롤타워로서 질병관리본부 + 국립감염병연구센터 및 국립감염병전문병원
 - 감염병 효과적 대응을 위해 일본 ‘청’ 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 광범위한 공감대
 - 박능후 장관: ‘일본 청 승격 → 감염대책기구 상설 가능, 지역 감염 대처에 장점, 불리해지는 점도 많다.’
 - * 자료: 메디칼업저버 2020. 2. 19.(<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99>)
 - 지자체의 현장 지휘 · 감독 + 권역별감염병전문병원(지방)
 - 국제협력 지원체계(예: WHO COVID-19 16인 국제특위 위원회의 경우)

건강안전국가에의 길

- 보건국가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시스템 패키지

- 2) 자원

- 공공의료자원(인적, 물적, 제도적)의 확충
 - 긴급사태 인력 증강: 상비군과 예비군 개념으로 인력 확보
의료진, 역학조사관, 의료관리인력, 자원봉사인력 등
 - 역학조사관 인력 부족 문제: 역학조사관 수는 일본 소속 77명, 각 시도 소속 53명
 - 단기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처우 개선책을 논의한 후에 인력 채용(특히, 지방 인력 확충)
 - 중장기적으로는 국책 연구기관을 설립해 인력을 채용. 가령 역학조사관, 일본 산하 연구기관서 양성하는 방안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2020년 2월 12일)

- 보건국가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시스템 패키지

- 3) 제도와 정책도구들

- 비상대비계획(Emergency and Contingency Plan): 위기상황에서의 조직 적응, 자원 동원 등을 위한 단계별 계획 + 경제, 사회, 문화 등 영향평가 및 대응조치 계획
 - 자원의 동원 · 최적 배분 및 복구 준비
 - 자원의 유한성, 평소와 비상시 가용자원의 한계 고려
 - 조기경보 등 초동조치, 자원 동원 및 관리의 타이밍이 중요
 -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대한 대비
 - 비상시 적기 자원 동원 및 관리를 위한 대비
 - 평소 가능한 한 최대한의 대비

- **보건국가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시스템 패키지**

: Elements of Pandemic Preparedness

3) 제도와 정책도구들

- 비상시 방역대책 외에도 빈곤, 식량, 타 질병, 사회 및 지역갈등, 교역, 출입국 관리를 포함한 대외관계 문제 등 범국가적, 사회전방위적 대응 필요
-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봉쇄 등 강제조치에 따른 자원관리와 비용쇄 체제에서의 자원관리
- Post Crisis Review와 학습, feedback

- **감염병 대응 및 방역 정책 이슈**

- 1) **감염병 대응 및 방역 전략**

- **검사, 추적조사, 격리, 치료,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 Dr. Fauci said the US should develop its capacity for widespread testing, contact tracing, and case isolation - “the things that were not in place in January.”

- **한국식 방역 모델: ‘검사-추적-격리-치료’**

- **선제적 · 공격적 대량 검사**

- **감염경로 및 접촉자 추적(ICT 기반 추적 및 공개)**

- : 휴대폰, GPS 등 이용한 확진자 행적, 동선 추적 및 시간대별 공개(투명한 정보공개)

- 인식과 경각심(awareness and alertness) 제고에 주안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 :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 28개 관련 기관 실시간 정보 교환으로 10분 이내 확진자 동선 입체적으로 파악

- **감염병 대응 및 방역 정책 이슈**

- 1) **감염병 대응 및 방역 전략**

- **광범위한 ‘자가격리’ 시행**

- **격리이탈자 문제**

- **봉쇄, shutdown, lockdown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 **감염자와 접촉자 추적, 격리, 치료의 전략으로 사회 전체,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출입통제조치 없이 방역 추진, 감염 확산 차단 성과**

- **컨트롤타워로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 **의료진의 헌신과 시민사회의 협력**

- **검사키트 개발 등에 있어 민산관협력**

- **감염병 대응 및 방역 정책 이슈**

- 2) 감염병 대응조치의 필요조건

- 필요성(necessity)
 - 투명성(transparency)
 - 비례성(proportionality)
 - 적시성(time-bound)
 - 시기·단계별 검토(periodic review)

[쟁점] 백신이 나오는 즉시 접종을 의무화(Impfpflicht)할 것인가?

Impfpflicht gegen Coronavirus? "Der Schaden wäre fatal."

- **정치와 과학**

- 1) **정치가 과학을 다루는 방식**

- 과학은 대표하지 않으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가 과학을 지배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다.
 - 정치가 과학을 만나는 모습에서 국가별로 극명한 대조
 - [일본] 아베와 도쿄 올림픽

- WHO 총장 고문인 시부야 교수(King's College London)

- : 일본, 과학이 정치에 종속돼 코로나 대응 늦었다, 정부 전문가회의 무능 비판, 의료현장 혼란 우려한 검사축소 탓에 오히려 감염확산 · 의료붕괴 지적

- [미국] 재선을 노리는 Trump와 Fauci & Birx

- : Trump' s suggestion of injecting disinfectant as treatment

ISSUES TO TACKLE



- 정치와 과학

- 2) 우리나라에서 정치가 과학을 다루는 방식

- 과학이 정치, 행정에 종속?

- “일본, 관료 말고 사이언티스트가 중심 돼야” (박도준 서울의대 교수, 前국립보건연구원장)

[참고] 메르스 사태가 끝난 후 감사원은 복지부와 일본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때 양병국 당시 일본 본부장 등 9명이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권고를 받았다.

“메르스 사태 때 의사면허를 가진 일본 직원들은 자기 업무가 아니어도 자원해 방역 업무를 도왔던 걸로 안다. 그 결과가 징계로 돌아오자 조직 내에 ‘괜히 나서지 말자’ 는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고 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사명감을 갖고 감염병 대응에 몸을 던지겠나.”

“올해 복지부 예산이 82조 원이 넘는데, 그중 연구개발(R&D) 분야에 배정된 돈은 7000억 원이 채 안 된다. ... R&D는 뒤로 밀린다. ...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철저히 과학적 시각에서 대응해야 한다. 정치적 관점을 버리고 전문가들이 정부 조직 안에서 비교적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판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관련 투자도 늘려야 한다.”

*출처: 정은경 본부장이 날마다 직접 브리핑하는 이유, 신동아 2020년 4월호
(<https://shindonga.donga.com/3/all/13/2019203/1>)

- **Privacy, 기본권 이슈**

- 1) 감염자나 그 접촉자군의 Privacy 또는 개인정보 훼손 우려

- 이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 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파시스트-히스테리 보건국가(faschistoid-hysterischen Hygienestaat)
: Hans-Jürgen Papier(독일 前 연방헌법재판소장)의 경고, 위협에 처한 민주적 법치국가
 - 긴급조치가 관헌·감시 국가를 위한 자유권의 말살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 중증환자 치료시 젊은 환자 우대 등 고령자 차별은 안 된다.
 - 전면적인 이동금지는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ISSUES TO TACK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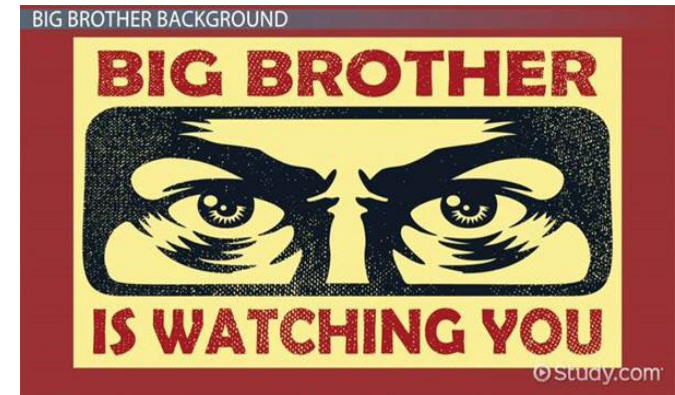
- Privacy, 기본권 이슈

- 2)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보호

- 감시와 와 밀고의 초감시문화(une culture de l'hypersurveillance et de la délation)

- : 프라델 변호사(Virginie Pradel)의 비판

빅 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출처: 프라델 변호사 페이스북 배경화면



- “한국은 감시가 심한 사회” (une société très surveillée)

- : 기 소르망(Guy Sorman). 前 Sciences Po(파리정치대학) 교수

- Privacy, 기본권 이슈

- 2)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보호

- 한국의 방역 방식이 개인 정보를 침해하고 사생활을 희생시킨다는 거부감 존재

- 프랑스 정부가 방역을 위해 도입 추진하는 ‘스톱코비드’ 어플리케이션은 GPS를 사용하지 않아 접촉 장소 정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센 반대에 직면

- 프랑스 정부의 이동제한령은 통행의 자유라는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반론

[참고]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르피가로지 일본 특파원 기사
*출처: Covid-19: « La condescendance de nos décideurs à l'égard des méthodes de la Corée est insupportable. » Par Régis Arnaud(correspondant du Figaro au Japon(<https://www.lefigaro.fr/vox/monde/covid-19-la-condescendance-de-nos-decideurs-a-l-egard-des-methodes-de-la-coree-est-insupportable-20200409>))

- 바덴뷔르템베르크 총리 Winfried Kretschmann

- : 접촉제한은 자유의 희생이 아니라 한시적인 제한이며,

- 재난상황(Katastrophensituation)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위기가 끝나면

- 곧 바로 복원된다고 공언



- **Privacy, 기본권 이슈**

- 3) 봉쇄의 이중효과

- 봉쇄로 인해 빈곤과 기아가 발생할 가능성
 - 자유의 침해와 Privacy의 비교형량 필요
 - 이동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행복추구권(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파생) 등의 일반적 금지 또는 제한과 감염자나 그 접촉자군의 Privacy, 개인정보 보호 비교형량
 - 입법권자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유의하여 입법으로 구체화
 - : 헌법 제37조 제2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3.4.)
 - 감염자나 그 접촉자군의 자유 못지않게 그로 인한 전염 위험에 처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및 일반 대중들의 알 권리, 자유 보장도 중요

- **Privacy, 기본권 이슈**

- 4) 시민사회와 공공성

- “공중보건과 같은 더 큰 공익을 위해 한국인들은 개인 정보와 관련해 어느 정도 타협할 의사가 있고 그것은 시민의식” : 박은하 駐 영국대사

*출처: 2020.4.12. 스카이뉴스 인터뷰시 ‘한국에서 CCTV를 사용하고 휴대전화의 GPS 정보를 활용하고 신용카드 거래기록을 썼다는데 대해 개인정보와 관련한 우려가 없는가’에 대한 응답

- 공동체윤리의 고조

- 책임윤리

- 공동의 위기 앞에서 감염병 전파에 있어 개인 책임의 중요성과 선택의 파급효과에 대한 공유된 인식

- **포스트코로나 사회경제정책의 방향**

- 1) Great Divide: Inequality Issue

-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흑인 · 아시아인 · 소수인종 집단(BAME) 감염율, 치명율이 그 밖의 인구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다는 조사보고
 - 빈민, 고위험군(고령자,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자, 비만, 흡연자 등)에 대한 검사, 치료 등에서의 차별 문제
 - 지역, 소득, 연령 등에 따른 차별과 격차 심화
 -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의료비 부담의 문제
 - 재택근무(WFH)의 특권 누릴 수 없는 계층이 곤경에 처함(hardship)으로써 빈곤 악화
 - 적대감과 긴장 고조 → 정치적 · 사회적 불만과 분노 언제라도 폭발 위험

[참고] 봉쇄로 코로나 확산은 막았지만 인구밀도 높은 빈민가 사망 폭증, 이동제한령 거부하며 방화 · 폭동, “위험 인지하고도 초기대응 부실”, 의사 600명 총리 상대 법원 소송, 정부 무능에 분노 목소리 잇따라
*출처: “코로나 대응 무능한 정부에 불복중” 성난 프랑스 시민들, 한국일보, 2020년 5월 1일자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291728066060?did=PA&dtype=3&dtypecode=5106>)

- **포스트코로나 사회경제정책의 방향**

- 2) 코로나팬데믹과 경제위기: 우리는 우리가 있던 자리에 다시 돌아 올 수 있을까?

- 경제위기의 크기와 깊이, 길이, 장단기 전망

- 각국의 봉쇄, lockdown으로 인한 교역의 타격

- 특히 관광, 항공, 자동차, 의류 분야 기업이 직접 영향 → 경제 전반의 위기

- 코로나 칼바람: 일자리 위기

- 각국의 직접지불 처방들은 주효할까?

- 본격적인 탈(脫)세계화(degloabalization)?:

-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화한 생산 방식의 취약성 드러났고, 재편성이 불가피

- 밸류체인 자국·지역 중심으로 재편(Eric Johnson 존스홉킨스대 교수)

- globalization이든 glocalization이든, 밸류체인의 수요와 기본구조는 지속되지 않을까?



IV. Epilog

고향의 상실?

ADVANCED COUNTRY REDEFINED

- **고향의 상실(Ende der Heimat)?**

-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돌아갈 곳은 더 이상 우리가 있던 곳이 아니다.
- globalization 그리고 국제가치사슬
 -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등에 따른 국경봉쇄나 교역통제 등으로 타격을 받기는 하겠지만, 이미 구조적으로 깊고 넓게 뿌리내린 글로벌화된 세계질서와 현실은 여전히 견고
- 빈곤퇴치 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국제연대의 중요성 강조
 - 양자간, 다자간 협력과 연대 모색
 - 한미 / 한중일 / 남북 / 한-아세안 / 한-유럽 / 한-아프리카
- WHO의 공과와 향후 개혁
 - WHO의 임무와 역할을 얼마나 강화 · 실효화시켜 나갈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

- **Advanced Country Redefined**

- **살 만한 나라, 사업하기 좋은 나라**

- 진정한 의미의 ‘살 만한 나라’ (可居地), 그리고 ‘사업하기 좋은 나라’ (可業地)가 되려면 여전히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다(cf.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 **보건국가, 국민건강안전보장국가**

- 건강한 나라, 국가와 정부가 국민을 제대로 지켜주고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보건국가, 국민건강안전을 보장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